

##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2021. 5.

관 계 부 처 합 동

I. 가상자산 현황 .....	1
II. 그간의 정부 대응 .....	2
III. 가상자산 관리방안 .....	3
1. 가상자산 관리체계 강화 .....	4
2.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강화 .....	5
3.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 지속 .....	7
4. 블록체인 기술 · 산업발전 추진 .....	8
5. 旣개정 세법에 따른 과세이행 .....	9
IV. 향후 추진계획 .....	9

## I. 가상자산 현황

### ① (개요)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특금법)

\* 가상자산은 중앙은행 등이 아닌 민간에서 발행·유통되는 '가치의 전자적 표시'로 정의(IMF, '16.1)

\*\* 국제회계기준(IFRS), 일부 교환수단으로 사용 가능하나 높은 변동성으로 현금·금융상품으로 인정 곤란('19.9)

- '09.1월, 최초의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등장 이후 이더리움, 리플 등 전세계적으로 약 **9,500여 종류**의 가상자산이 **발행·유통**(코인마켓캡)

### ② (시장동향) '20.12월부터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자 및 거래규모 급증

- (사업자) 현재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60여개사**가 영업 중인 것으로 파악됨(5.20일 기준)

\* 금융위가 금감원, 은행, 민간자료 등을 통해 현재 파악한 가상자산 거래업자 수

- 현재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접수한 사업자는 없으며 **20개사**가 ISMS 인증, 이 중 **4개사**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운영(5.27일 기준)

- 다만, **4개사**의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함 (\* 참고2)

- (가입자) 4대 가상자산사업자\* 기준 현재 가입자는 중복 포함 **581만명**(<sup>21.4월말 기준</sup>)으로 파악

\*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

\*\* 신규가입자수 ('18.7) 32만 → ('19.3) 1.5만 → ('20.3) 21만 → ('21.2) 849만 → ('21.3) 111.6만 → ('21.4) 200.1만

- (거래규모) 4대 사업자의 평균 일거래대금은 약 **22조원**(<sup>21.4.1 ~ 4.30일간 일평균</sup>)으로 추정, 현재 약 **15조원**(5.27)으로 추정 (코인마켓캡 기준)

- (가격) 비트코인은 '18년말 **427만원**까지 하락한 이후, 연초부터 재상승하여 **8,075만원**(4.14)기록 후 현재 **4,600만원**(5.27) 수준

\* 비트코인가격(만원) : ('18.1.6)2,587 ('18말)427 ('20.9말)1,249 (12말)3,198 ('21.4.14)8,075 (5.27)4,640

- 김치프리미엄은 4.7일 20%까지 **확대**(최대 46.7%, '18.1월)되었다가, 불법행위 특별단속발표 이후 **한자리수** 대로 축소(8.7%, 5.27)

\* 김치프리미엄(%) : ('18.1.9)46.7 ('18말)2.3 ('20말)1.6 ('21.3말)6.3 ('21.4.7)20.1 (5.27)8.7

## II. 그간의 정부 대응

- 정부는 '17년부터 가상자산에 대해 국조실 중심으로 금융위·과기정통부·기재부·법무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 ① **투기과열 진정**, ② **불법행위 차단** 및 ③ **가상자산 관련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되, ④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 ① 가상자산 투기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보유·매입·투자 등을 제한**, **ICO**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등 금지('17.9~12월)

- ② '17.6월부터 가상자산 관련 사기·불법다단계·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 집중단속** → 현재 **'4~6월중 특별단속'** 시행중

• (금융위) 은행·FIU 등 자금세탁 분석 강화	• (경찰청) 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 (법무부) 직접수사(거액), 송치사건 엄정처리	• (공정위)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 (과기정통부) 보안취약점 점검·시정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처리 점검·시정
• (기재부) 외국인거래법령 위반 점검	• (방통위) 온라인 불법정보 차단
• (국세청) 고액체납자 강제징수	• (관세청) 외국인거래법령 위반 단속

- ③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특금법 개정 '20.3월) 및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추진**(소득세법 개정 '20.12월)

\* 특금법 시행전 가상통화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를 가이드라인 형태로 시행('18.1월)

- 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을 요건으로 **신고 의무\*** 부과(3.25~) 및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 추진**(<sup>22.1~</sup>)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유예기간(6개월) 부여 : 3.25일~9.24일

- ④ 블록체인 기술 육성을 위해 **'블록체인 기술 발전 전략'**(<sup>18.6월</sup>),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sup>20.6월</sup>)을 수립하고, 정책적 지원 추진

- **병무청**(간편인증), **해수부**(항만 물류), **서울의료원**(보험청구 등) 등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

☞ 가상자산 시장규모 증대로 불법·불공정행위로 인한 참여자의 **피해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거래투명성 제고** 및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할 필요

### Ⅲ. 가상자산 관리방안

- ◆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 제고 및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에 중점을 두고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을 병행 추진
- 단계적 대응 추진 : ① (9.24일 以前) 사업자 리스크 선제관리, 불법행위 단속 ② (9.25일 以後)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③ 제도보완 지속

#### < 기본방향 >

- ① 가상자산은 누구도 가치를 보장할 수 없고, 큰 손실이 발생 가능하므로 자기책임하에 거래 등을 신중히 판단할 필요
- ② 가상자산 거래투명성을 강화하고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참여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자 관리 강화와 불법행위 단속 강화 추진
  - ❶ 가상자산사업자 내에서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고객자산 안전 보관
  - ❷ 가상자산사업자 외에서의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 ③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산업 육성은 지속 추진
- ④ ‘소득있는 곳에 과세있다’는 원칙하에 가상자산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3년부터 신고 납부

### 1 가상자산 관리체계 강화

-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에 국세청·관세청을 추가하여 불법행위에 전방위적 대응
  - 가상자산 관련 불법·불공정 행위의 양태가 다양한만큼 국조실이 운영하는 가상자산 관계부처 T/F를 통해 각 부처가 소관분야 대응
-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은 금융위\* 주관,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추진
  - \* 금융위에 관련 기구·인력 보강 추진
- 관계부처 T/F 산하에 기재부·금융위·과기정통부·국조실이 참여하는 「지원반(반장 : 기재부 1차관)」을 구성·운영
  - 부처간 쟁점 발생시 ‘지원반’에서 논의·조율 추진

#### <부처별 추진업무>

부처	소관분야
금융위	▪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가상자산 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
기재부	▪ 지원반 운영, 가상자산 과세, 외국환거래법령 위반여부 점검 등
과기정통부	▪ 블록체인 산업육성, 가상자산사업자 해킹 방지 등
검·경	▪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등 범죄 단속 등
공정위	▪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직권조사
개인정보위	▪ 거래참여자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대응
국세청	▪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등
관세청	▪ 가상자산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

## 2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강화

### [1] 9.24 以前 리스크 관리 : 조속한 신고 유도 및 컨설팅 실시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거래참여자 자산 등을 소위 '먹튀'할 경우 거래참여자 피해 우려

➔ 9.24일(사업자 신고 마감일) 前 가상자산사업자 폐업에 따른 거래참여자 피해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체계 구축·시행

□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①신고 관련 컨설팅 실시 및 ②신속신고 심사·접수, ③신고현황 공시 및 유의사항 홍보, ④검거강화 및 엄정처리 추진

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속한 신고를 위해 희망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 관련 컨설팅\* 제공(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

\* 과기정통부(044-202-6463), 금융위원회(02-2100-1732), 금융감독원(02-3145-7504)으로 문의 가능

-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위한 요건(실명확인입출금계정, 정보보호 인증체계 등)과 필요한 보완사항 등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컨설팅 실시

② 신고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는 9.24일 이전이라도 조속히 신고접수되도록 신고 신청시 신속 접수·심사 추진

-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로 시장참여자들이 거래를 이전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신고 심사하여 피해 예방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시장참여자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신고 신청·수리현황 공개 및 거래 유의사항 등을 지속 홍보

- 금융위원회, 과기정통부, 국조실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배너 설치 등 관계부처 공동 홍보 강화

④ 가상자산사업자 현황을 검·경 등 단속기관과 공유 → 수사 실효성 제고

- 예치금 횡령,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검·경을 통한 검거 강화 및 엄정 처리

## [2] 9.25 以後 체계적 관리 :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 강화

### ①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적용규정

① (신고 의무)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요건\*을 갖추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의무(변경·갱신시도 적용) → 위반시 징역·벌금 등

\*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②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③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금융관련법령 등 위반 없을 것 등

② (자금세탁방지) 자금세탁방지를 위하여 의심거래보고,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이용한 거래 등의 의무 부과

-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내부통제 기준마련,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등 특금법상 기본적 의무 적용 →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 등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고객 거래내역분리 관리, 다크코인\* 거래 금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금지 등 가상자산 사업자 특례 규정·적용 →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 가상자산 이전시 전송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가상자산

③ (횡령 방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예치금을 횡령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예치금 분리관리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영업정지·신고 말소 등

④ (해킹 방지) 가상자산 해킹 예방 등 시스템 보호 강화를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의무화 → 위반시 신고 불수리·말소

-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신고 말소·불수리

\*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ISMS 인증 발급·관리·갱신을 3년마다 시행

### ②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① (취급금지 가상자산 규정)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매매·교환을 중개·알선하는 행위 금지(→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② (사업자의 시세조종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및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행위 금지(→특금법 시행령 개정 추진)

- ③ **(가상자산 보관 강화)** 해킹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토록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상향 적용**(70% 이상) 검토

\*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아 해킹이 어려운 지갑(USB 보관, 종이 지갑, 하드웨어 지갑 등)

### 3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 지속

- 가상자산 수요증가로 관련 **불법행위** 및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이전 고객자산 횡령 우려 증가**

- 가상자산 투자를 빌미로한 유사수신, 가상자산사업자의 기획파산을 위한 출금지연 등 관련 불법행위 유형이 점차 다양화

#### ➡ '범부처 가상자산 불법행위 특별단속'\*(4~6월)을 9월까지 연장 실시

\* 특별단속으로 경찰은 사기·유사수신 등 41건 및 해킹·피싱 등 사이버 범죄 27건 수사,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 불공정여부 직권조사하는 등 적극 대응 중

- **횡령, 코인발행·판매 관련 사기, 해킹, 투자 빙자 유사수신, 피싱·스미싱** 등 주요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 대응

#### <중점단속 불법행위 유형>

- ① 가상자산·원화 등 출금 지연·정지 이후 거래소를 폐쇄하는 기획 파산 및 예치금 횡령 등  
→ **특가법상 사기, 횡령·배임** 등
- ② 상장 관련 편의 제공을 조건으로 별도의 대가(상장피)를 받거나 가치없는 가상 자산 발행·판매·상장 등 → **특가법상 배임 및 사기, 유사수신행위** 등
- ③ 데이터상 허위로 자산을 입력하여 기망하는 수법 등으로 재산상 이익 편취  
→ **사기·사전자기기록위작** 등
- ④ 해킹 및 해킹을 가장한 기획파산 →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횡령·배임** 등
- ⑤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수신·편취  
→ **특가법상 사기·유사수신행위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등
- ⑥ 가상자산거래업자 사이트를 가장한 **피싱·스미싱**을 통해 아이디 비밀번호를 탈취  
→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 피해자의 재산상 회복을 위해 수사과정상 확인된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적극·신속히 추진**

- 관계부처간 수시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 공조강화를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 해소 및 실효성 제고 및 실적점검을 통해 지속 보완

### 4 블록체인 기술·산업 발전 추진

- 국민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사례 발굴

- 전문가, 공공·민간기관 수요조사를 통해 성과창출이 가능한 집중 추진분야를 선정하여 **확산사업 대형화 추진 검토**(‘22~)
- 파급성·시급성은 높으나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블록체인 사업을 대상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 활용 지원** 추진(‘22~)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기업 육성

- 수요발굴→컨설팅→기술검증 등 중소·초기기업들의 기술·서비스 검증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22~)
- \* 현재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단계로, 향후 ISP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신남방국가 등 해외에서 **블록체인 기술·비즈니스를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해외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검증 지원**(‘21~)

-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규제 발굴

- 법률·산업·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반을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숨은 **규제 발굴 및 개선 방안 논의**(5월~)
- ※ 발굴된 규제들은 국조실, 기재부 등을 통해 개선 추진
- **분산ID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전자서명 등 후속 개선 논의 추진

- 기술격차 극복을 위한 차세대 기반기술·산업화 융합기술 확보

- **기존 블록체인의 한계 극복**을 위해 거래처리 속도 향상, 대규모 데이터 관리 등 도전적 분야의 **핵심 기반기술 개발** 추진(‘21~’25)
- ※ 참여자간 합의기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기술, 신원관리 기술, 데이터 관리 기술 등 블록체인 핵심 기반기술 개발에 5년간 총 1,133억원 투자(‘20.6월 예타 통과금액 기준)
- **블록체인과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AI, IoT 등)을 융합**하고, 타 산업에 접목하여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환 촉진(‘22~)

## 5 既개정 세법에 따른 과세이행

### □ '22.1.1. 이후 가상자산의 양도·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23.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납부

- \* 가상자산을 1년 간 양도·대여하여 발생한 이익·손실을 통산하여 이익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 세율로 분리과세(250만원 기본공제)
- \*\* '22.1.1. 전에 보유하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12.31. 당시 시가와 해당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의제
-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22.1.1. 이후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과세관청에 납부

#### < 과세 필요성 >

◆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 소득간 형평성\*, 해외 주요국 과세 동향\*\* 등을 감안할 때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필요

\* 경품, 사례금, 미술품 등에 대해서도 기타소득으로 과세 중

\*\* (美) 10~37%, (日) 15~55%, (英) 10 / 20%

○ 아울러,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해외·비상장\*주식 등의 과세체계와 유사한 수준

\* '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에서 해외·비상장 주식은 20% 세율(3억 초과시 25%) 및 250만원 기본공제 적용(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부과)

○ 불법행위 단속, 거래 투명성 제고(특금법·시행령 개정 등) 등 거래참여자 피해예방 조치를 기반으로 과세를 시행

### □ 과세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과세자료 제출 등)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 IV. 향후 계획

### □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국조실장 주재)를 수시 개최하여 기관별 추진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

### □ 가상자산 시장동향, 제도개선 효과 및 청년 등 거래참여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보완 지속 검토·추진

○ 가상자산 관련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 예정

## 참고1

## 주요 대책별 향후 일정

추진과제	소관부처	일정
1. 9.24 前 리스크 관리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컨설팅	금융위·금감원 과기정통부	~9월말
2)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신청시 신속 접수·심사	금융위	~9.24일(접수)
3) 조기신고 및 홍보	금융위	~9월말
4) 적발 및 처벌	검, 경 등	계속
2. 가상자산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	금융위	~9월말
3. 불법행위 범부처 특별단속	관계부처 합동	~9월말
4. 가상자산 과세제도 시행 준비	국세청	~12월말
5. 블록체인 기술발전·산업육성	과기정통부	계속



## &lt; 가상자산 거래업자 현황 &gt;

구분	가상자산 거래업자	계
ISMS 인증 획득 및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운영	두나무 주식회사(업비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빗썸), 주식회사 코빗(코빗), (주)코인원(코인원),	4
ISMS 인증 획득	주식회사 뉴링크(캐서레스트), (주)뱅크(보라비트), (주)스트리미(고팍스),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엑시아소프트(코인빗), 오션스 주식회사(프로비트), 주식회사 인터내셔널비트익스체인지(아이빗이엑스), 차일들리 주식회사(비둘기지갑), (주)코어다스(코어다스), (주)코엔코코리아(코인엔코인), 주식회사 텐엔텐(텐엔텐), 주식회사 포블게이트(포블게이트),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한빛코), 주식회사 피어테크(지닥),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플라이빗), 후오비 주식회사(후오비 코리아)	16

\* '21.5.27일 기준, 거래업자 순서는 가나다순

※ ISMS 인증을 획득하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미 개설받은 경우라도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심사과정에서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컨대, 해당 법인·대표자·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조달금지법, 금융관련법률(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12제3항 참조) 등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음
- 또한, 현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 개설된 거래업자의 경우에도 신고를 위해서는 은행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음